

북한개발의 조건과 전망

신종대* · 황재준** · 김시황***

- I. 서론
- II. 개념정의: 북한문제와 북한개발
- III. 북한개발의 조건
- IV. 북한개발과 남북협력, 그리고 국제협력
- V. 결론

요약

이 글은 기존의 대북한 지원이 단기적인 조치일 뿐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질서의 불안정의 한 요인인 북한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북한개발에 주목하였다.

북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편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개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포괄적인 개발을 수용하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대내적으로는 북한개발에 관한 남한의 사회적 합의, 그리고 북한의 개발 수용능력과 주인의식의 강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북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핵문제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술지원을 포함한 비 금융지원과 같은 '제한적(limited) 북한개발'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방안일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 북한 실정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맞춤식(tailored) 개발'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열악한 변수들을 극복하고 '제한적 북한개발'을 넘어 '포괄적(comprehensive) 북한개발' 단계로까지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I. 서론

지난 1995년에 북한은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자연재해로 인해 이른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즈음하여 북한은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십여년 동안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김대중 정부 이후 이러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점차 개발협력 지원으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대북지원이 정부 차원을 넘어서 민간 차원으로까지 지원 창구가 다원화되면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 의료, 환경 등 비정치적인 분야의 개발협력 지원을 통해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남북협력을 이러한 대북지원의 한 축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북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사실상 식량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 불법 금융활동 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대외적 고립을 보다 심화시켰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및 국제사회의 이상과 같은 대북지원의 양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대북지원에서 국제사회보다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으로서는 기회이자 제약이다. 대북지원의 이니셔티브를 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이다. 반면에 대북지원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한국 사회 내부의 일정한 동의와 합의 절차를 필요로 할 만큼 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투입재원의 한계와 국제적 규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 등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국제사회는 북한과 관련한 당면한 현안들을 연계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 정책'¹⁾에 입각하여 각종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1) 이것은 지난 2002년부터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위해 취하고 있는 대북 경제 및 군사 정책을 일컫는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은 구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이미 1980년대부터 실시해왔던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구소련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의 군사적, 경제적 봉쇄정책을 실시했다. 군사적으로는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오늘날 MD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우주 미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대내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정부 및 민간단체,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기존의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협력 지원으로까지 그 분야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 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개발지원으로까지 확대해야만 하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 질문들이 바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 글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북한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개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북한개발을 가능케 하는 주요 조건은 무엇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 조건들은 크게 대내적 조건과 대외적 조건으로 나뉘며 대내적 조건의 경우 남북한 대내적인 측면을, 대외적 조건의 경우 북핵문제와 미국의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춰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궁극적으로 북한이 자체 개발역량을 확보하고 발휘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끝

으로 5장은 이상의 논의들을 요약하여 제시할 것이다.

II. 개념정의: 북한문제와 북한개발

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며 개발협력 지원으로까지 그 분야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문제와 북한개발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용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되었을 때 대북지원이 왜 개발협력 지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문제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지난해 9월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관련국들이 머리를 맞댄 제4차 6자회담에서 극적으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난항을 거듭했던 북핵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다자적 보장 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북한이

사일 요격 방위망(SDI) 개발을 시도했으며, 소련 점령 하에 아프가니스탄의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동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련의 석유 가격에도 타격을 입었으며, 소련이 서유럽과 가스파이프 라인을 연결을 시도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였다.

미국 달러 위폐문제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연루되어 있고 이에 따른 미국의 고강도 금융제재까지 이어지면서 핵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핵문제와 여타 북한과 관련한 문제들이 별개의 문제인 동시에 깊숙이 연계되어 있으며, 하나의 문제 해결은 여타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제공할 수 있어도 궁극적 해결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북핵문제는 수많은 북한문제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북핵문제의 해결이 북한문제의 해결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북핵위기 해소 이후에도 또 다른 북한문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즉, 북핵위기 해소 이후에도 북한의 생화학무기,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및 부품의 해외수출, 위조지폐·마약의 생산 및 판매 등의 많은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문제’를 ‘북핵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는 북한이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의혹 내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차원의 문제들을 풀어 나가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응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편입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북한을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북한개발을 진행시켜야 한다. 즉, 경제적 협력관계의 증진에 따라 북한이 실패국가(a failed state)를 극복하고 신뢰를 얻어 국제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개발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해왔다.²⁾ 그러나 기존의 구호성 지원은 단기적인 조치일 뿐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비판이 높아지면서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이론적·실천적 시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³⁾

그렇다면 북한개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

2)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구호성 지원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88년 시작된 남북한 경제협력도 이러한 대북 지원의 성격을 상당부분 유지한 채 진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본문 <표 1>을 참조할 것.

3) 남성욱,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한국학중앙연구원·유럽한국학회·국제고려학회 공동주최 제1회 세계한국학대회 발표문, 2002년 7월 18일 ~ 20일; 이상준, “북한의 지역개발 과제와 국제협력 전략,” 『국토연구』 제34권, 국토연구원, 2002. 9; 이상준, 이성수,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할 수 있는가? 오늘날 개발(development)은 기존의 경제적 차원에 한정되었던 개념 이상으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한다.⁴⁾ 즉 개발은 인간이 사회 내에서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권(human rights),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비롯한 각종 제도 등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필요한 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해 볼 때 북한개발은 크게 ‘포괄적(comprehensive) 북한개발’과 ‘제한적(limited) 북한개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포괄적 북한개발’은 경

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제도 등의 차원을 포괄하는 발전으로서 다차원적인 개발의 동시 진행이다. 둘째, ‘제한적 북한개발’은 경제적 차원의 북한개발에 집중하면서 다른 영역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발의 형태이다. 즉 ‘포괄적 북한개발’과 달리 일정한 시차를 두고 개발의 영역을 경제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서 ‘포괄적 북한개발’의 전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⁵⁾

현시점에서 다차원적인 북한개발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시킨다는 ‘포괄적 북한개발’은 적실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현재

방안』, 국토연구원, 2002; 양문수, “북한 경제 개발에서의 남한 정부의 역할 - 중국변수를 고려한 남북경협에 새로운 방향성 모색,” 『동향과 전망』, 2002년 가을호; 윤덕룡,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2005 개원 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임강택, “동북아 국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2005 개원 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통일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북한대학원대학교 공동 주최,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발표문, 2005년 7월 6일 ~ 7일.

- 4) 미국 의회 예산처는 개발을 일인당 국민총생산의 장기적 발전, 교육수준 증대, 보건상황의 개선, 인구 증가율의 적정성 유지, 자원, 환경, 식량 등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The Role of Foreign Aid in Development, May 1997, p. 3, 이종무, “대북 개발지원에 관한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주최, 북한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제2회 전문가 토론회 발표문, 2005년 9월 8일, 재인용; 세계은행은 개발의 의제로서 과거에는 개발도상국가의 소득 증대에 초점을 두었으나 현재 소득증대 및 소득의 안정성 확보, 문맹 퇴치, 무력감 극복 등 빈민들이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하였다. World Bank,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Assistance: Lessons From World Bank Experience, The World Bank, 2002, pp. 5~6.
- 5) 제한적 북한개발의 주요한 지원 영역으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들 수 있다. 기술지원의 정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아직 정립된 개념이 없다. 그러나 기술지원에 있어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 노하우(know-how)의 전달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 따라서 제한적 북한개발의 전개에 있어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resources)으로서 물질 자원(material resources)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의 동원, 그리고 지식의 전달이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적 북한개발이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적 차원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타 영역에 걸친 다양한 요소의 부분적 동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주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한적 북한개발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기술지원의 개념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임을출, 최창용, “북한 개발지원 방향과 전략: 기술지원과 PRSP의 연계,”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통일연구원, 2005, pp. 49~77 참조할 것.

북한이 자국의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지원 및 무역 등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나 체제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의 북한개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괄적 북한개발'은 북한 지도부가 선택할 수 없는 위험한 옵션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이후 경제개혁·개방의 주요 조치⁶⁾를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개혁 조치와 함께 군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유지 및 사회주의 원칙의 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05년 '배급제의 부활'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 지도부는 북한 주민의 생명선인 식량에 대한 국가통제의 확보를 통해 체제유지의 근간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식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은 개혁 정책의 후퇴⁷⁾라기보다는 개혁의 수위 조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

고 북한의 사회주의 원칙 고수가 북한 내부의 통합의 관점에서 주장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실리를 정책결정의 최우선에 놓을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⁸⁾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 지도부 내에서 획기적으로 체제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이른다.⁹⁾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발의 형태인 '제한적 북한개발'이 더욱 적실성이 있다고 하겠다.

III. 북한개발의 조건

1. 대내적 조건: 남북협력에 관한 남북한 내적 환경의 변화

남북 양측의 협력은 지난 1988년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비롯되었다. 물론 현재는 이때와 비교해 볼 때 남북협력의 창구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차원의 참여까지 확대된 상

- 6) 김영운, 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정세분석2005-02』, 통일연구원, 2005년 3월, p. 46 참조.
 7) 미국은 공공연히 북한의 개혁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North Korea Rolls Back Some Economic Reforms, Strengthens State Controls," November 8, 2005, Voice of America, <http://www.voanews.com/english/2005-11-08-voa26.cfm> (검색일: 2005년 11월 12일)
 8) 조명철 외, 『7.1 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203, 258~259.
 9) 김정일은 북한의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정치적 통제력(political control)을 유지하기 위해 군에 대한 투자(military investment)를 지속하면서 경제개혁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북한체제 내부의 이견(political and bureaucratic struggles)도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분란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경제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김정일의 숙제이다. Michal O'Hanlon and Mike Mochizuki,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 New York: McGraw-Hill, 2003, pp. 127~128 참조.

〈표 1〉 한국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2006.3.9 현재)

(단위: 만불)

구 분		'95.6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 계
한 국	정부	23,200	305	2,667	1,100	2,825	7,863	7,045	8,375	8,702	11,512	12,388	235	86,217
	민간	25	155	2,056	2,085	1,863	3,513	6,494	5,117	7,061	14,108	8,866	1,432	52,775
	계(A)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6	13,539	13,492	15,763	25,620	21,254	1,667	311,426
국제사회 (B)		5,565	9,765	26,350	30,199	35,988	18,177	35,725	25,768	13,932	16,323	14,564	-	-
총계 (A+B)		28,790	10,225	31,073	33,384	40,676	29,553	49,264	39,260	29,695	41,943	30,120	-	-
A/A+B (%)		80.7	4.5	15.2	9.5	11.5	38.5	27.5	34.0	53.1	61.1	59.3	-	-

※ 북한이 '04.8월 UN 통합지원절차(CAP)에 따른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2005년 이후는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지원실적 파악 곤란.

출처: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통계』, <http://www.unikorea.go.kr/kr/KPS/KPS0202R.jsp>(검색일: 2006년 3월 18일).

태이며, 협력의 분야 역시 경제협력 외에도 인적, 사회적 교류 등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남북협력에서는 여전히 경제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한 점에서 남북경협을 둘러싼 남북한 내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적어도 북한개발에 관한 일정한 동학(dynamics)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은 1988년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북한과의 물자를 교류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에 남북 교역액은 총 1억 3,000만 불이었으나 이로부터 15년 뒤인 2005년에는 9억 7,000만 달러에 달해 약 7.5배 성장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기 이후 교역 규모에 있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¹⁰⁾ 1998년 이후의 남북교역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수로사업 및 금강산 관광사업 등 시설투자를 위한 기초원자재 및 설비시설물, 관련 물품들이 북한에 대량 반출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인도적 대북 지원액도 늘어나고 있다.¹¹⁾ (〈표 1〉 참조)

10)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는 1998년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남북경협도 침체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이전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북한 교역규모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2005), 『6.15 5주년 남북관계 추진현황 및 평가』, 2005년 12월.

11)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에서 대북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일정 정도 북한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기인하지만 남북 양측이 경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는나 하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점에 기초해 볼 때, 그동안의 남북경협은 실질적인 경제협력이라기 보다는 지원이라는 측면이 훨씬 압도적으로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 한국은 애초에 남북경협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분단 이래로 대립과 반목을 거듭했던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이든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남북경협을 일종의 대북 시혜로 생각하고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일정 정도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¹²⁾ 따라서 남북경협의 성격은 구호성 지원이 주류를 이루었고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앞서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방적 지원의 성격이 강한 남북경협의 확대는 국내적으로 대북한 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하기도 하였다.¹³⁾

반면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와해로 인한 대외적 고립과 체제생존의 위

기에 직면하여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유일한 창구가 한국 이외에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경협이라는 카드를 받았다. 북한은 애초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위해 경협에 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근년 들어 한국은 남북경협의 성격을 단계적으로 ‘지원’에서 ‘개발’로 전환함으로써 국내적인 비판을 불식하고 궁극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¹⁴⁾ 한국은 앞으로 남북경협의 규모를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2020년에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을 정도로 남북경협에 거는 기대치가 높아졌다. 한국이 2020년을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시점으로 설정한 것은 APEC이 2020년까지 역내 관세장벽 및 투자 장벽을 없애고 자유경제지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러한 조건이 구축되는 시점인 2020년이 남북

12) 이러한 전략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남북경협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그 성격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경제 협력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신림, 이석기,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을유문화사, 2003, pp. 38-39.

13) 김대중 정부시기 대북포용 정책과 남남갈등의 증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 과정,”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2004, pp. 32-46 참조할 것.

14) 대북지원의 성격변화는 그동안 남한의 정치권과 정부차원에서 제기되어온 문제였다. 예컨대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제기된 이른바 ‘북한관 마셜플랜’ 또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중대 제안’ 등도 대북개발지원의 논의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한범, “대북지원 10년의 성과와 과제: 대북개발지원을 위한 제언,”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통일연구원, pp. 2005, 88-91.

북한개발을 위한 남북경협이 보다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발전 전략의 일환이 되어야 하며 북한과 호혜적 협력관계에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에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의 진전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경제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¹⁵⁾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에도 이미 관세장벽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이 대북지원에 무게중심을 두기보다는 호혜적인 산업협력의 측면을 보다 중점적으로 확대시켜 교통·물류, 에너지, 통신 등 이른바 3대 사회간접자본의 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닦아 나간다면 2020년까지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그다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자.

북한 당국이 1990년대까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본격적인 개혁·개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즉,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은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부자원의 동원을 극대화하거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들이었다.¹⁶⁾ 이러한 북한의 소극적인 경제정책은 만성적인 물자부족을 극복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봉착한 북한은 기존의 단순지원이 아닌 개발지원의 필요성

을 절감하고 있다. 즉,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대북 제재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강한 외부 구호성 지원을 통해 체제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면서 ‘체제개선’을 위해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1월 ‘신사고’를 주창하면서 경제운영의 변화를 모색하다가 2002년 7월 1일에 ‘경제 관리 개선조치’를 전후로 하여 여러 분야에 있어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자본주의 제도와 기능을 접목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¹⁷⁾ 이밖에도 북한은 2002년 9월에 ‘국방공업 우선’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새로운 경제운영 방침으로 설정하고 기간산업 및 각 부문의 관리 운영 및 경제개혁 추진 논리로 활용하였다. 또한 ‘신의주특별행정구(2002년 9월)’, ‘금강산관광지구(2002년 10월)’, ‘개성공업지구(2002년 11월)’를 각각 지정하여 특구 중심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모색하였다. 2004년 1월에는 ‘가족단위 영농’과 ‘기업개혁’조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5) 『조선일보』, 2005년 11월 23일 참조.

16) 토지정리사업, 감자혁명, 이모작, 종자혁명이나 중소형 발전소의 건설, 과학기술중시정책, 분조관리제의 개편, 무역관리의 분권화, 헌법의 개정, 정부조직의 개편 등도 기존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시스템의 상당부분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성욱, 앞의 책, 2002, pp. 10-12.

17) 7.1 조치 이후의 북한이 취하고 있는 여러가지 조치 등이 체제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신호로 보아야할 지, 혹은 기존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체제개선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북한이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며, 북한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2005년 11월에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에 대하여’¹⁸⁾라는 지침을 통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북한 내수시장 개방, 세금 감면 혜택 등 기업 환경 개선책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경제개혁 및 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은행법(2002년 11월), 회계법(2003년 3월), 재정법(2004년 4월), 상업법(2004년 6월) 등 경제관련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고, 경제 전문가들의 세대교체를 통해 경제부문에 대한 내각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였다.

북한은 제도적 개혁과 함께 대외적인 고립 상태와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과거의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된 남북경협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대외적 고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교류협력은 북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 비료, 외화 등의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긴요한 수단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도 남북경협이 ‘북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개발’에

적합한 형태로 진전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대한 이러한 환경 변화는 ‘상호 위협 해소 및 경제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반영한다. 남북한은 2005년 7월 12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12개 문항의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쌍방이 갖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앞으로 경제협력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한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¹⁹⁾ 그리고 2005년 10월 28일에는 개성공단에 남북경제협력협 의사무소를 개소(開所)했으며, 바로 이곳에서 2005년 11월 14일에 남북 기업간 사업협약이 처음으로 이뤄지기도 했다.²⁰⁾ 이밖에도 최영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이 2006년 1월 26일 북한에서 열린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활성화”²¹⁾를 언급한 것도 남북경협의 근본적인 성격변화를 잘 반증하고 있다. 즉, 남북한은 남북경협의 성격이 대북

18) 『동아일보』, 2005년 11월 30일 참조.

19) 합의문 전문은 『국정브리핑』을 참조할 것, <http://www.news.go.kr> (검색일: 2006년 3월 1일).

20)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경협사무소 회의실에서 김근호 대표 등 남측 (주)태림산업 관계자 6명과 북측 개선무역총회사 관계자 등이 화강석 가공공장 건설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5년 11월 15일.

21) 『조선중앙통신』, 2006년 1월 27일, <http://www.kcna.co.jp> (검색일: 2006년 3월 2일).

한 ‘지원’에서 ‘개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경제협력의 단계로 도약하는데 있어 남북 양측 모두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볼 때, 현재의 남북경협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²²⁾

2. 대외적 조건: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북한개발에 대한 논의에 있어 대내적 조건과 함께 중요한 변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적 조건이다. 즉, 북한개발은 남북한 내부의 환경과 함께 한반도의 대외적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다. 냉전 직후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사실상 동맹국을 상실하고 대외관계의 통로가 급속도로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경제의 몰락,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위조지폐, 마약 등의 북한문제의 부각,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악화, 미국 중심의 대북제재의 유지 등은 북한을 옥아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핵문제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오늘날 북한의

대외관계개선 및 남북경협 활성화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경제제재와 북한의 핵문제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이다. 미국이 북핵문제의 협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이용하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지만 북핵문제 해소와 동시에 대북제재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북제재와 북핵문제는 사실상 궤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자국의 외교수단 중 하나인 대북경제제재를 일시에 철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²³⁾

1) 북핵문제

북한의 핵문제는 10년 이상 지속된 일이다. 미국은 한때 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의 동원도 고려한 바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6자 회담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정체와 진전을 반복하면서 평화롭게 해소되는

22) 동용승은 남북경협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남북간 교류의 방식이 간접방식에서 직접방식으로 바뀐 2000년 정상회담 개최시기를 첫 번째 변곡점으로, 그리고 남북경협의 지향점이 남북한의 공동발전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을 두 번째 변곡점으로 파악하였다. 동용승,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상관관계,”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06년 2월, pp. 8~9.

23) 그러나 대북 경제제재의 강도나 규제의 상태를 볼 때 국제적 원조 및 개발 지원 등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세부적으로 완화될 소지는 있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변 국가들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동북아의 국제관계도 대결과 갈등보다는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긴장 해소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간 교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간 경제적 이익의 획득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간 국제제도 정립, 지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역내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지역적 분쟁 요소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북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이라크 전쟁과 달리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한 이후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치러야 하는 비용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셋째, 북핵문제의 핵심 해당국가인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정체와 진전'이라는 협상과정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핵문제 이외에도 인권 문제, 마약 및 위조지폐 문제 등의 북한 문제를 다층적으

로 동원하여 이른바 '맞춤형 봉쇄'를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협상을 보이콧하는 '정체'와 협상이 되지 않는 '정체 상황'의 책임이 미국에게 있음을 6자 회담 당사국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설정하면서 미국이 협상에 재차 임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진전'의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와 진전'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적지에 점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2)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는 크게 상업 및 금융거래의 실질적 금지, 미국내 북한자산의 동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원조제한, 북한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정, 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 관련 수출입 금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전쟁중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북한의 남침억제, 테러국가에 대한 지원 및 무기거래,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 등과 연계되어 이루어진 것이다.²⁵⁾

24)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들은 지난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에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마련했다. 이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25) 조동호, 김상기,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적 효과," 『KDI 정책포럼』, 제149호, 한국개발연구원, 1999, p. 2.

이러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제재의 목적과 성과라는 관점에서만 볼 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애초의 목적도 많이 희석된 정책이 되었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까지 대북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일정 정도 북한을 압박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1997년 4월 7일자로 대북 경제제재 중 ‘해외자산통제규정’을 개정하여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연합 및 국제적십자에 기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거래’와 ‘미국인이 제3국에서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각각 허용한 바 있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과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다시 말해 북한은 여전히 테러국 지원이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자금공여나 물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가 인도적 지원 차원이나 비영리적 사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필요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활용하고 있다.²⁷⁾ 최근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 강화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은 2005년 조선풍봉총회사 외 2개 회사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지원기업 지정(2005년 6월 29일), 조선광성무역 외 7개 회사에 대한 자산 동결(2005년 10월 21일), 북한의 주요 외환 거래 은행인 방코 델타 아시안은행(Banco Delta Asia)에 대해 ‘돈 세탁 우려(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대상으로 지정(2005년 9월 16일)하는 등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2006년 들어 미국은 북한의 위조 지폐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북한이 홍콩에 개설한 일부 은행 계좌중 미국 달러화 위폐 및 담배밀수와 연관된 계좌들에서 미화 267만 달러 이상을 압류하는 계획²⁸⁾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냉전 이후 북한의 해외 출구를 더욱 축소시킴으로써 외형적으

26) Washington Times, April 27, 1998.

27) 남성욱, 앞의 책, 2002, pp.12-14 참조; 『연합뉴스』, 2005년 11월 10일. <http://www.yonhapnews.co.kr>(검색일: 2005년 11월 17일); The Department of Treasury, "Treasury Designates Banco Delta Asia as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under USA PATRIOT Act," September 15, 2005, JS-2720, <http://www.treas.gov/press/releases/js2720.htm> (검색일: 2005년 11월 17일).

28) 『연합뉴스』, 2006년 2월 27일 <http://www.yonhapnews.co.kr>(검색일: 2006년 2월 28일).

로 북한을 옴아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북제재는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금융제재 등 부분적으로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제재는 역설적이게도 북한에게 고통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대북제재 유지 및 강화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고립을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중국 및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²⁹⁾를 유발하고 있다. 즉, 북한은 대북제재의 부담감 속에서 체제의 생존을 위해 체제 내적인 개혁 진행과 함께 한국 및 중국과의 교류확대라는 2중 구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대북한 소모성 지원구조를 탈피하고 개발지원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IV. 북한개발과 남북협력, 그리고 국제협력

북한개발은 기존의 남북협력은 물론이며,

국제협력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달성 가능한 프로젝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의 관련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일정한 양자 또는 다자협력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개발의 중심축은 한국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대북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의 규모와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서는 북한개발과 관련한 지원문제의 국민적 합의 내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고, 국제사회는 현재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개발에 대한 인식과 소극적 입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1.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의 성격은 탈냉전을 전후하여 ‘지원’에서 ‘개발’로 전환되는 추세이다.³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은 냉전기에

29)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온다는 의미로서 통상 사용된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국제관계에 있어 “미국 및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북한의 대외관계가 한국 및 중국 쪽으로 경도되어 확대되는 것”이 풍선효과와 흡사하기 때문에 사용하였다. 문제는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압박이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북한체제 자체의 붕괴도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이 경우 풍선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협력의 확대나 북중협력의 확대는 소모성 지원 같은 임기응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북한이 안전하게 국제사회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개발지원이 되어야 한다.

30) 박재영,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선진국에 의해 진영 관리차원에서 제공되었으나 냉전 해체 후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개발원조의 성격도 인도적 지원 등의 소모성 지원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자생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이 원활히 유입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북한 단순지원 구조를 개발지원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개발지원과 관련하여 볼 때 그 본격적인 시도는 1998년 UNDP를 중심으로 소개되었으며, 이는 북한에 나름대로의 개발프로젝트를 용인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평가를 전제로 하였다. 즉, 효율화, 투명화, 지방분권화, 참여증가 등의 징후가 명백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내부결속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름대로의 대처구조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³¹⁾ 그러나 당시 이러한 평가가 지속되지 못한 채 유보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북한 체제가 이러한 대외적 지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로드맵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앞서 <표 1>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듯이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북지원이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에는 지나친 경계심과 지원절차 등에 관한 협의와 집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마찰 등으로 인해 이른바 ‘지원의 피로현상(donor’s fatigue)’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북한 당국은 대외지원이 갖는 체제에 대한 외부 공개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국제사회는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에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좀 더 국제표준에 맞도록 전향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피로가 누적되고 북핵문제 등 북한개발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난항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발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³²⁾ 일례로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일부 NGO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에서 북한의 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완제품 형태의 대북지원을 제약설비의 설치 및 현지 생산과 분배라는 형태로 전환해 가

터 주최, 북한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제1회 전문가 간담회 발표문, 2005년 7월 25일.

31)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통일연구원, pp. 37-38.

32) 지난 2001년 6월에 개막된 ‘제1회 대북협력 국제 NGO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 개최된 ‘제4회 대북협력 국제 NGO 회의’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NGO 대표들은 현재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이 종식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긴급구호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개발지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5년 5월 31일, <http://www.yonhapnews.co.kr>(검색일: 2006년 2월 28일).

고 있다.³³⁾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핵문제 타결이나 북한 정권의 몰락시점까지 유보해서는 안된다.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본구도는 북핵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 지도부가 국제표준과 선결해야 할 과제들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데 있다. 그리고 지원의 주체인 국제사회와 지원대상인 북한은 각각 핵문제 타결 등 일련의 북한문제가 타결되었을 때 변화의 요구에 적실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발의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은 크게 비금융지원(Non-Financial Support)과 금융지원(Financial Support)의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³⁴⁾ 비금융지원에는 경제 관료에 대한 시장경제 및 국제상거래에 관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이 포함된다. 금융지원은 북한에 대한 개별 국가 및 국제기구의 차관지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기 어렵고, 대북한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개발지원을 본격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요컨대,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체제붕괴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북한 당국의 제한적인 개방의지³⁵⁾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개혁개방수준 사이의 간극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양자 간의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제사회의 개발 지원이 본격적으로 북한개발에 유입되기는 어렵다. 특히 대북제재로 인해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은 상당기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개발지원은 불가피하게 당분간 기술지원 등 비금융지원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개발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개발을 체제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 및 접근코자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요하네스 린(Johanness F. Linn)³⁶⁾은 기존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

33) 백재중,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주최, 대북지원 10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발표문, 2005. 6. 22, p. 44.

34) 남성욱, 앞의 책, 2002, pp. 14-18 참조; 이종운,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제지원 현황과 향후과제,” 『KIEP 세계경제』, 제6권 제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년 6월, pp. 79-83 참조.

35)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체제안정과 대외적으로 ‘체제보장’이라는 생존환경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체제전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 대내적으로 기존 경제체제의 모순의 확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보장’과 ‘체제안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제사회의 개발 지원을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36) Johanness F. Linn, “Making the Transition from Plan to Market: Experience and Lessons,”

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것을 토대로 북한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린의 분석결과는 첫째, 체제전환국가의 전환성공 및 실패에 있어 초기조건³⁷⁾, 개혁의 속도 및 강도, 정치적·사회적 안정성 등의 대내외적 변수가 있다는 점, 둘째, 이러한 변수의 조합이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셋째 한 국가의 체제전환 성공의 변수(예를 들면, 개혁의 속도가 빠른 것)가 다른 국가의 체제전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넷째 초기조건 및 외부의 금융 및 정치적 지원은 체제전환의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점 등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를 북한개발에 접목시키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초기조건에 적합한 경제개혁의 속도와 강도 선택, 대내적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성, 대외적으로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의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 국가의 발전모델을 북한개발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셋째, 현재 북한의 초기조건이 열악하고 외부의 개발지원을 제약하는 요인이 잔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개혁의지가 확고하다면 북한개발이 실패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요컨대, 북한개발이 북한 실정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맞춤식(tailored) 개발’로 진행된다면 북한이 지니고 있는 열악한 변수들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의 ‘포괄적 북한개발’로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2. 북한개발과 남북협력

북한개발에 있어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이 당분간 유입되기 힘든 주요한 이유로서 국제사회의 지원에 수반되는 이행조건(conditionality)을 들 수 있다. 체제개혁의 성공사례인 중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외부의 지원이 아닌 화교의 자본이 상당부분 유입된 후³⁸⁾ 이행조건의 수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이어졌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대단히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다. 따라서 북한이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에

한국수출입은행·북한대학원대학교 공동 주최,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발표문, 2005년 7월 6일-7일.

37) 초기조건에는 자연자원 및 인적자원, 인구, 인종 구성, 종교, 정치·경제·사회 구조 및 경제상황, 세계시장과의 접근성 그리고 법·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된다.

38) 오승렬, “북한의 경제개발과 재외동포의 대북투자,” 『통일문제연구』, 제16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2004, pp. 49-51; 조명철 외,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pp. 190-195.

수반되는 조건을 쉽사리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은 북한이 일정한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하고 북한 지도부의 개발의지 및 국제사회로의 편입 의지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다만 국제금융기구 및 개발기구들이 취해 온 개발지원의 조건과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은행 또는 IMF 등 국제기구들이 주도하여 실시하는 개발지원의 조건과 방식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완화되고 수혜국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있다. 예컨대 1990년대 들어 세계은행과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수혜국의 주도권과 참여과정의 확대를 통해 개발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시도에서도 잘 알 수 있다.³⁹⁾ 그러한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개발과 관련하여 금융지원과 같은 본격적인 개발지원보다는 기술지원을 포함한 비금융지원이 적합하다.

바로 이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북한개발을 북한이 경제적 자생력을 회복하고 안정화를 달성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 역시도 개발의 대상인 동시에 이를 지

속적으로 이끌어 나가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수용능력(absorptive capacity)’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외부의 개발지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에 관한 ‘주인 의식(ownership)’이 전제되어야 한다.⁴⁰⁾ 북한개발에 있어 북한의 주인의식이 결여된 외부의 지원은 기존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의 의지와 주인의식, 그리고 외부의 지원이 결합되어야만 북한개발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남북한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남북협력의 진전을 고려하면 한국이 북한의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남북경협은 활성화는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의사소통의 채널로서 심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이를 통해 북한개발에 있어서 북한이 주의의식을 갖고 개발 역량을 구축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인도할 수 있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포함 일련의 대북협력의 ‘지원’에서 ‘개발’ 또는 호혜적 차원으로 그 성격

39) 임을출, 최창용, “북한 개발지원 방향과 전략: 기술지원과 PRSP의 연계,”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통일연구원, 2005, p. 67.

40) 북한이 외부세계의 개발지원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포괄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선진기술과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을 바꿔야 한다. 한국은 남북협력의 전향적인 발전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중개자가 되어 긴장상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지금은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신뢰(trust)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상호 신뢰회복이 이러한 긴장관계 해소에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은 지금껏 진행해온 대북지원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술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북한지역에 기술전문가 등을 파견함으로써 북한이 향후 국제적 대북지원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다음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개발 지원의 유입을 통한 본격적인 북한개발이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체제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북한에 각인시킴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대신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개발은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 안에서 신뢰받는 행위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즉, 북한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킨다면, 첫째 붕괴된 북한경제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고, 둘째 북한의 일관된 개발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축적될 것이며, 셋째, 국제사회는 한국을 중개기지로 삼아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통해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북협력 사업의 지속은 국제사회가 대북한 개발지원 및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즉, 남북경협은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여 북한의 선택에 따라 북한이 국제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북한개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경제적인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이 독립적인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닌 개발지원 차원에서 남북한 상호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한반도 평화유지 및 동북아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유지

에 필요한 ‘평화비용’⁴¹⁾을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향후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⁴²⁾

남북협력을 매개로 한 북한의 국제협력 확대는 중단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남북경협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⁴³⁾

V. 결 론

지금까지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북핵문제=북한문제’라는 등식으로 오해받는 것은 북한문제에 있어 북핵문제의 비중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9월 제4차 6자 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공동성명에 합의함으로써 군사적인 방법과 같은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령 향후

북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철회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핵문제 이외의 또 다른 북한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존의 대북 지원은 단기적인 조치일 뿐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의 한 요인인 북한문제의 근원적인 해소 방안의 하나로서 북한개발에 주목하였다. 북한문제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편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개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 발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북한개발과 국제협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어야만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편입 후 개발’이라는 구도로 북한개발을 분석·전망하였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됨으로써 국제금융기구 등

41) 평화비용은 통일 이전 한반도 평화 유지와 정착을 위해 지불하거나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이다. 평화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운 외,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통일정세분석2005-17』, 통일연구원, 2005년 10월, pp. 1~3을 참조할 것.

42) 북한 개발지원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목표 및 방안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윤대규, “북한 개발지원의 당위성과 추진방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한국국제협력단 공동 주최, 북한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 전략정책토론회 발표문, 2005년 10월 25일.

43) 이상준, 이성수, 앞의 책, 2002, p. 207.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지도부(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선택이다. 따라서 북한이 원치 않는 경우 북한을 강제로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관한 방법은 북한이라는 '특수한 폐쇄국가'에 적용하기 위한 상당기간의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체제 불안정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로부터 이탈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지도부가 국제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 한 북한의 고립은 지속될 것이고 북한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북한개발을 '포괄적 북한개발'과 '제한적 북한개발'로 구분하였다. 현재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긴장은 체제붕괴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북한당국자의 제한적인 개방의지와 북한체제를 개혁하려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개혁개방 수준의 충돌에 기인한다. 양자 간의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이 본격적으로 북한개발에 유입되기는 어렵다.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은 북한이 일정한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하고 북한 지도부의 개발의지 및 국제사회로의 편입 의지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본격적으로 유

입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적실성이 있는 방안은 기술지원을 포함한 비금융지원과 같은 '제한적 북한개발'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제한적으로 대내적으로는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과 대외적으로 핵문제와 대북제재라는 변수의 변화를 조망하면서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역할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남북경협의 성격을 단계적으로 북한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소모적인 구호성 지원이라는 국내적인 비판을 불식하고 궁극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도 기존의 단순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북한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남북한은 '상호 위협 해소 및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면서 남북경협의 성격이 대북한 '지원'에서 '개발'로 바뀌어야 한다는 동일한 인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 대내적 조건과 함께 중요한 변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적 조건이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금융제재 등 부분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제재는 역설적이

제도 북한에게 국가 생존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북한은 대북제재의 부담감속에서 체제의 생존을 위해 체제 내적인 개혁 진행과 함께 한국 및 중국과의 교류확대라는 2중 구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대북한 소모성 지원구조를 탈피하고 북한개발 지원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은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신뢰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상호신뢰 회복은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은 남북경협의 전향적인 발전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중개자가 되어 긴장상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인도할 수 있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지원'에서 '개발'로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은 남북경협의 양적·질적 활성화를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의사소통의 채널 역할을 담당하여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 북한 실정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맞춤식 개발'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열악한 변수들을 극복하고 '제한적 북한개발'을 넘어 '포괄적 북한개발' 단계로까지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문자료

- 김영윤 외 5인,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통일정세분석2005-17』, 통일연구원, 2005년 10월.
- _____, 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정세분석2005-02』, 통일연구원, 2005년 3월.
- 남성욱,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한국학중앙연구원·유럽한국학회·국제고려학회 공동주최, 제1회 세계한국학대회 발표문, 2002년 7월 18일~20일.
- 동용승,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에 상관관계,”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06년 2월.
- 박재영,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주최, 북한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제1회 전문가 간담회 발표문, 2005년 7월 25일.
- 백재중,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주최, 대북지원 10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발표문, 2005년 6월 22일.
-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2004.
- 양문수, “북한 경제 개발에서의 남한 정부의 역할 - 중국변수를 고려한 남북경협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동향과 전망』, 2002년 가을호.
- 오승렬, “북한의 경제개발과 재외동포의 대북투자,” 『통일문제연구』, 제16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 윤대규, “북한 개발지원의 당위성과 추진방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한국국제협력단 공동주최, 북한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 전략정책토론회 발표문, 2005년 10월 25일.
- 윤덕룡,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2005 개원 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통일연구원, 2005.
- 이상준, “북한의 지역개발 과제와 국제협력 전략,” 『국토연구』 제34권, 국토연구원, 2002.
- _____, 이성수,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의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2002.
- 이종무, “대북 개발지원에 관한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주최, 북한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제2회 전문가 토론회 발표문, 2005년 9월 8일.
- 이종운,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제지원 현황과 향후과제,” 『KIEP 세계경제』, 제6권 제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년 6월.
- 임강택, “동북아 국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2005 개원 기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통일연구원.
- _____, 김상기,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적 효과,” 『KDI 정책포럼』, 제149호, 1999.
- 임을출, 최창용, “북한 개발지원 방향과 전략: 기술지원과 PRSP의 연계,”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통

- 일연구원, 2005.
- 조명철 외,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_____, 『7.1 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조한범, “대북지원 10년의 성과와 과제: 대북개발지원을 위한 제언,”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통일연구원, 2005.
- 최신립, 이석기,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을유문화사, 2002.
- 통일부, 『6.15 5주년 남북관계 추진현황 및 평가』, 2005년 12월.
-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통계』, 2006년 3월 9일.
-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
- 『동아일보』, 2005년 11월 30일.
- 『연합뉴스』, 2005년 5월 31일.
- _____, 2005년 11월 10일.
- _____, 2006년 2월 27일.
- 『조선일보』, 2005년 11월 15일.
- _____, 2005년 11월 23일.
- 『조선중앙통신』.

2. 영문자료

- Linn, Johannes F, “Making the Transition from Plan to Market: Experience and Lessons,”
한국수출입은행·북한대학원대학교 공동 주최,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발표문,
2005년 7월 6일~7일.
- O’Hanlon, Michal and Mochizuki, Mik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 (New York: McGraw-HiLL).
- Robert Cassen and Associates, Does Aid Work? (Oxford: Clarendon Press, 1986).
- The Department of Treasury, Press Room, “Treasury Designates Banco Delta Asia as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under USA PATRIOT Act,” September 15, 2005,
JS-2720, <http://www.treas.gov/press/releases/js2720.htm>
- Voice of America, “North Korea Rolls Back Some Economic Reforms, Strengthens State
Controls,” November 8, 2005, <http://www.voanews.com/english/2005-11-08-voa26.cfm>
- Washington Times, April 27, 1998.